

탈냉전시대의 大學과 大學文化

李 鍾 昨

(啓明大 社會學科)

대학과 대학인은 항상 시대의 조류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의 부분이다. '89년 이래 세계사회주의권의 대변화,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의 한국 정치상황은 현시기 대학사회에 충격을 가하고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환경 속에서 대학의 변화가 가져올 大學社會의 새로운 像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大學人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대학과 대학인은 항상 시대의 조류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文化는 항상 시대의 새로운 조류나 혹은 유행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전파시키는 장이었다. 지나간 30년간의 시대에 대학은 때로는 퇴폐와 소비문화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저항과 진보적 문화활동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4.19 학생혁명 이래 대학 캠퍼스는 항상 권위주의적 정부와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으며 여기에는 항상 정치적 긴장이 팽배하였다. 그뿐 아니라 '70, '80년대에 이르러서 대학은 반정부운동의 가장 중요한 온상의 하나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급속한 한국사회의 산

업화과정에서 파생한 노동문제를 위시한 사회문제의 가장 활발하고 급진적인 토론의 장으로 화하였다. 즉, 대학은 정치적 사회적인 저항과 급진주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운동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저항과 급진주의 세력은 전통적으로 대학을 가장 주요한 장으로 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87년 이래, 특히 '93년의 '문민정부' 출범 이래 한국의 정치상황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덧붙여 '89년 이래 세계사회주의권의 대변화는 대학사회의 지적 정치적 분위기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러한 정치상황과 사회이념의 변화를 대학이 여타의 사회기관, 예를 들어 정부, 기업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는가 혹은 정부, 기업 같은 사

회일선거관들이 지식인 집단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빨리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였는가는 흥미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대학은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빠른 변화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가졌을 大學社會의 새로운 像은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대학인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대학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첫째로 대학의 행정과 기구, 둘째로 교수사회의 지적 분위기, 셋째로 학생운동과 학생들의 생활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大學民主化와 大學改革

오늘의 정치개혁의 일차적 계기는 '87년의 6·29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6·29선언은 정치사회의 민주화로의 계기였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기부문의 민주화를 촉발하였는데, 이 와중에서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교수들의 대중조직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출범하였다. 민교협이 출범한 이후 '88년에 들어서서는 지방과 서울에서 각 대학별로 '교수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협의회에 의한 직선 총·학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민교협과 교수협의회로 상징되는 이러한 大學民主化는 말하자면 밀으로부터의 대학개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곧바로 많은 사학에서 기존의 재단 내지는 총·학장들과의 격심한 대립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87년의 6·29선언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대학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교육민주화 혹은 교육자주화 운동을 불러일으켜 '89년에는 현재까지 한국교육계 최대의 현안이 되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87년에서 '89년까지의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가 밀으로부터의 추동력에 의하여 이 시기에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비록 16년만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탄생하였다고 하나 '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수행하

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88년 이후의 상황에서 밀으로부터의 개혁 움직임과 정치권력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대치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89년 이후의 소위 '공안정국'의 출현과 전교조의 탄압으로 가시화되었다. 문제를 대학사회에 국한시켜 본다면 '87년 이후의 민교협, 교수협의회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추동된 대학개혁과 대학민주화는 이후 상당한 정체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민주화의 담보상태는 정치적 상황의 保守化라는 외적 여건과 아울러 대학교수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의 保守性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결국 기존의 관행과 인습의 벽을 뚫기에 대학의 민주화를 주창하는 세력이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87년의 노도와 같은 대중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대학민주화운동이 다분히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였으나, 이는 '89년 이후 대중운동의 침체 속에서 더 이상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의 좌절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정 차원에서의 '임시부정사건'이 터지면서 그나마 있던 대학의 도덕적 위신은 급락하였다. 이로써 대학은 아직도 교육부로부터 독립한 자주적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관의 지시, 감독 아래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임을 사회에 공시한 것이었다. '운동권'의 퇴조라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분위기의 보수화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경제계에서의 요구는 대학에 대하여 脫정치화 방향으로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을 위시한 사회로부터의 대학에 대한 요구는 대학에 대해서 구체적 '生産性'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손익개념과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의 제고가 현재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적 합리화라는 요구에서 성역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국방 분야에 이러한 요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대학이 이런 의미에서의 성역으로 더 이상 온존될 수는 없으리라 고 여겨진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대학의 쇄신을 위한 대학의 기구와 조직, 그리고 운영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한 누가 이 개혁과 쇄신의 주체인가를 살펴보자.

민교협이나 교협 등의 밑으로부터의 개혁세력이 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것은 우선 분명하다. 다음에 사립대학의 재단이나 총장 등 현재의 대학 집행부가 이러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냐도 불분명하다. 어느 누구도 대학개혁의 당위성 혹은 긴절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되는 '21세기의 대학'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가설적 시안 수준 이상의 논의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정을 척결한다는 정도가 21세기 대학으로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학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바로 이런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요란히 운위되는 문민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개혁의 방향은 결국 위로부터의, 즉 중앙정부의 추동력에 의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교육부 관료체계를 가지고서 과연 21세기형 대학으로의 개혁책이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87년 이래 대학민주화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그것은 총·학장 직선제일 것이다. 그러나 총·학장 직선제가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이제 퇴색되고 있다. 그것은 총·학장 직선제 이후에 대학개혁과 민주화의 진척이 기대 이하로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총·학장 직선제라는 걸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대학의 발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임명제식 총·학장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점증한다고 할 수 있다. 교수, 학생, 직원 등의 대학주체들은 이제 다시 한번 대학운영의 합리화와 실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즉 국제화 추세에 걸맞는 대학의 현대적 제도와 기구를 위한 진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 敎授세계의 知的 분위기

흔히들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발전에 관하여 '압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말은

한국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서구에서 2백여 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발전을 시간을 '압축'하여 이루어냈다는 뜻이다. 이러한 압축적 발전이라는 표현은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아니라 지식 및 학문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원용이 가능한데, 특히 사회이론과 이론에 관한 분야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80년대의 知的 風土'를 보면 과거 서구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존재하였고 실희되었던 거의 모든 사회운동과 혁명의 이론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소개되고 토론되고 또한 많은 경우에는 시도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는 탈냉전 이후 시대에 걸맞게 또한 각종의 파파이론과 문화에 관한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70년대의 유신시대'에서 '87년까지는 하나의 독특한 '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이 시기에 한국의 대학과 지식인 세계는 일종의 저항정신 혹은 저항문화가 풍미한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여 보면 유신시대라는 것은 하나의 특수하고 극단적인 형태였을 뿐이지 한국의 知識人 世界는 항상 저항과 비판과 냉소주의에 젖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느 세대나 소위 정상적인 시대를 살아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회 혹은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탈냉전 이후의 인식의 혼란이라는 것을 이런 각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박정희 정권 및 그 후계자들과 그간 30여 년의 대치상태에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그 30년 전쟁이 일단 끝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시대의 종언과 아울러 한국 지식인의 思考 主題와 方式에 크나큰 변화를 조만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이미 도처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70, '80년대에 지적인 성장을 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주의 내지 급진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향후 어떠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학문과 창작에 임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그리고 대학사회에서는 이러한 한 세대의 지식인들과 이들과 전혀 다른 시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겠다. 일본 및 서구에서 나타나는 '60년대의 급진적 분위기에서 지적 성장을 경험한 오늘날의 중견 교수들과 지금 대학생들과의 사이에서의 문화적 세대 차이도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인 것은 '60년대 세대들은 학생시절에 그들의 선배세대, 즉 '50년대 세대와 이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진 세대 갈등을 가졌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진보—보수의 이러한 世代間 循環이 우리 한국의 대학사회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0, '80년대의 급진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지식인들은 이제 대학 박사과정에 있거나 혹은 최근에 임용된 소장교수층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20, 30대에 정열과 확신으로 추구한 가치체계가 이제 무가치한 것이 되었거나 혹은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 앞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세대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학계에서 전보학계라고 불리우는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된 학문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조심스런 內省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보다 정치적 윤리적 가치의 혼란 이외에 지식인들에게 닥쳐온 또 하나의 도전은 정보화사회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체계에 대한 適應의 문제이다. 새로운 기술체계와 이의 광범한 적용에 적응해 나가지 못할 때 자신이 '구세대'로, 즉 쓸모없는 지식인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은 중견급 연구자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앞의 세대간 가치관 혹은 문화 차이에 관해서는 대학인이 새로운 시대 환경을 선구적으로 예견하고 선도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70, '80년대의 급진주의가 지적 유행이 아니라 知的 遺産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제반 논의에 관한 수준 높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졸속한 수용과 무책임한 폐기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지적 '암흑적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인지 새로운 지적 사조가 충분히 논의되거나 수용되기도 전에 이를 다시 사조에 맞춰서 폐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는 그다지 지성적인 풍토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인은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서가는 자세와 아울러 외부의 풍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둔감한, 즉 古典的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기술체계에의 적응문제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이다. 새로운 기술체계를 의면하는 것이 고전적인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기존의 각자의 작업방식을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작업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중견연구자들이라 하더라도 신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대로인가에 관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마치 총검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하는 유격전에서 커운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현대의 무기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전의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견연구자들은 비록 쉽지 않더라도 이런 면에서의 적응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學生運動과 學生文化

1960년의 4월 학생혁명 이래 한국의 대학에는 강력한 학생운동이 존재하여 왔다. 한국 학생운동은 정권에 대하여 때로는 국회 내의 야당보다도 더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學生運動은 노동운동을 위시한 여타 사회운동에도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사회운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학생운동의 노선논쟁, 시위행사에 영향받은 바가 막대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학생운동 출신들은 노동현장 등에 진출하여 조직가와 이념의 전파자로서 작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80년대 한국 사회는 학생운동의 문화 혹은 學生文化가 지배적이었던 시기라고까지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의 현역 정치인 중에는 수다한 사람들이 학생회장 등을 역임한 학생운동 출신들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학생운동 출신이 이렇게 사회 각계 및 정치권에까지 광범히 진출한 예는 희귀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이렇게 막강하였다 하더라도 대학 캠퍼스가 학생운동에 의하여 전일적으로 지배된 것은 아니었다. 학생운동이 지배문화로서 작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下位文化로서의 구미식 소비문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다고 여겨진다.

학생운동을 대학 캠퍼스 내의 지배적 문화라고 본다고 할 때에 이 문화의 연원은 결국은 두 가지였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민족적 혹은 민족주의적 전통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서구사회주의에서 연원한 민중적 혹은 계급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학생운동 내지는 사회운동 일반의 문화는 구미를 연원으로 하는 상업주의 문화와는 분명히 획을 긋는 것이었다. 민족적 민중적 운동권 문화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재정권에 대한 학생운동의 자기희생적 투쟁이 여타의 문화에 대하여 道德的 優位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신 치하에서의 학생운동가들의 헌신적 자세는 이들의 도덕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80년대 들어 학생운동이 대학 내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반독재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서 학생운동 내에서는 '70년대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분파가 발생하였으며 이들간의 이념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앞에서 얘기한 민족적 계급적 가치 간의 갈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제 학생운동은 더 이상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화, 이론화의 과정에서 논리의 무리, 경색성이 노정되면서 '70년대와 같은 거의 무조건적인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 '운동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헌신과 신뢰를 상징하는 단어로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어의를 띠어가고 있다. 운동권이란 파괴적이고 무리한 억지를 쓰는 집단 정도로 대중들에게 자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바로 운동권이 이제 한국사회

내에서 도덕적 권위와 대중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즉 政治的 指導性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런 현상에 대해 소위 '운동권'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져야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는 소위 제도권 보수언론의 작품일 수 있다. 문제는 제도권 보수언론, 더 나아가서 지배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문화적 이념적 복합체에 대하여 운동권이 자기방어를 헤낼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운동권 내부의 분열, 언어와 논리의 경색화와 아울러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권의 패배,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순교자적 헌신과 투쟁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에도 상당한 관성은 존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비타협적 투쟁문화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존속하리라고 여겨진다. 지난 5월과 6월에 있었던 韓總聯의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과거 관행이 관성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군중시위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의 한총련 시위와 한 경관의 죽음은 학생운동의 흐름에서 한 획을 긋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대학 내에서 운동권 문화는 과거와 같은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대학 내에는 어떠한 지적 문화적 현상이 오게 될 것인가.

일차적으로 그것은 민족적 민중적 가치관, 즉 이념적 가치관과 탈이념화 혹은 탈정치화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말하자면 文化的 複數主義는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현상으로 전혀 새로운 양상은 아니다. 이 중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제 이념지향적 문화의 헤게모니가 사라진 대등한 복수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와중에서 이념지향적 문화의 퇴조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어쩌보면 대학 내에서 교조주의가 사라지고 자유주의가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는 대학과 학생의 사회 비판적 기능의 약화로 보아야 한다. 즉, 시민에서 개인으로, 행위자에서 관객으로, 또 사유하고 고민하는 인간에서 단지 즐기고 만족하는 소비자로서의 전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판이 사라지는 또 다른 형태의 획일화된 사회와 문화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 商業主義와 消費主義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민족과 민중이라는 언술이 이제 '70년대 혹은 '80년대와 같은 참신성이나 충격적 의미를 상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지향성이 총체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에 대하여 대학인은 우려하여야 한다.

대학은 인간의 역사가 창조한 지식과 이념과 경험의 창고라고 여겨진다. 비록 가두에서 더 이상 이념의 깃발이 나부끼지 않더라도 대학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반추하는 장소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을 철저하게 실용주의, 상업주의 원리로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학생 및 학생운동의 궤

念的 急進性에 대하여 일정한 관용이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이해와 관용의 호소만으로 학생사회의 保守化 내지는 商業文化의 확산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역사와 사회의 진보 그리고 인간화라는 것이 어느 때나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는 행위주체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학생운동의 청산이나 해소보다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참신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따라서 權威를 지니는 운동으로의 學生運動의 再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을 연상할 때에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비타협적 정치투쟁만이 학생운동의 내용이나 방식일 수는 없다.

만약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할 때라고 얘기하고 싶다. 바르게 생각하는 바를 혼련하고 이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를 토론하는 것이 지성의 임무라면, 학생운동과 학생문화는 이런 자세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